

# 지방권력 교체 'D-100' 정국 풍향 가른다

## 문재인 정부 중간성적표 여야 한판 승부 예고

### '신 4당 체제' 첫 시험대... '잠룡' 거취도 관심

전국 17개 시·도에서 오는 6월 13일 동시 실시되는 제7대 지방선거가 4월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 이후 정국풍향을 가늠할 1차 척도로 평가된다.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거머쥐는 쪽이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만큼 정권교체 후 명실상부한 중간성적표를 받아 드는 여당이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야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열전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해를 넘겨 정국을

뒤집든 중도통합할 정계개편으로 달라진 정치구도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신 4당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라도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선거를 치르게 되는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 + α', 등 돌린 보수표심을 아작 다 회복하지 못한 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 + α'를 1차 목표표로 세워 놓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1~2곳을 포함

해 최대 5명의 시·도지사 배출을, 민평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최소 1석 이상의 시·도지사를 배출하는 게 승부의 기준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아 든다면 여야 지도부 모두 견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지방선거 이후 정국 유통성은 한층 커질 수 있다.

민주당 추미애 지도부의 경우 압승을 거두지 못한다면 집권 2년차 본격적인 개혁동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탄핵과 대선을 잇달아 승리로 이끌어 냈다는 기존 성과에도 상처를 입게 된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보수층 결집에 실패할 경우 누적된 당내 불만이 폭발하며 현 지도부 교체에 대한 원심이 임계치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생인 바른미래당의 사실상 양대 주주인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적 기반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고, 민평당 역시 독자 생존에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또 다른 정계개편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100일 앞두고 여야의 대진표

가 속속 채워지며 '잠룡'들의 거취에도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열기가 이미 뜨겁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이미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의원 등이 일찌감치 경선전에 뛰어들며 '잠룡'급으로 분류되는 중진들이 대거 포진했다.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해철 의원,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인천시장도 박남춘 의원과 김교홍 전 국무총장, 홍미영 전 의원 등이 경쟁하고 있다.

반면, 전반적 인물기근에 시달리는

한국당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등 영남권 현역들이 출마를 못박은 가운데 이철우 의원과 이종혁 전 의원 등도 각각 경북과 부산시장에 출마표를 던지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갈수록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니총선'에 베품가게 판이 커진 재보선의 경우 민주당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안전 지사는 아직까지 출마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주변에선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 청 "문 대통령, 7일 여야대표 회동"

### 한국당 거부하면 4당 대표만 초청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설명하기 위해 이번 주 중반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와대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대표를 초청대상으로 정하고, 각 당에 7일 청와대에서 오찬 또는 만찬을 갖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의사를 밝힐 경우 여야 4당 대표만 초청해 회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7일 회동을 제안한 상태"라며 "오찬 가능성이 크나, 각 당 대표의 일정에 따라 만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당직사회에서 문 대통령의 여야대표 회동제와 관련해, "안보문제에 국한하고, 실질적 논의가 보장되고, 원내 교섭단체만 참석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홍 대표가 내건 조건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은 항상 정의당을 포함한 5당과 회동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와서 비교섭단체라고 배제하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동의 주요 의제는 남북대화 진행상황과 북미대화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각종 개혁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국민헌법 속의형 시민토론회

4일 오전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열린 국민헌법전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속의형 시민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조정 등 개혁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안 처리

국회는 5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 확정을 위한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번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지연 처리하면서 자정을 넘기는 바람에 본회의 의결이 무산돼 불가피하게 추가로 열게 된 '원포인트' 회의이다.

선거구 확정 시한은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이었다.

하지만 그 동안 헌정특위가 원활히 가동되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가 가까스로 합의할 여유도 일부 의원이 이에 반발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확정을 마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선거법 개정안만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지는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북·미 대화조건 살바싸움 '점점찾기' 속제

### 미 "비핵화 대화" vs 북 "전제조건적 대화 없을 것"

북미대화의 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살바싸움'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오직 비핵화 대화'를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강조하자 북한은 '전제조건 있는 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응수한 양상이다.

북한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외무성 대변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북미대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우선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남 때 밝힌 자신들의 '북미대화 용의' 표명 이후 미국에서 '적절한 조건' 하에서의 대화를 강조하는 반응이 나오는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에 걸치는 조미(북미)회담 역사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미국과 전제조건적인 대화탁에 마주 앉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

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군사적 선택을 피하지 않을 것" 등의 입장을 밝힌 것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북미대화 관련 입장표명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대화에 대한 양측의 기본의지는 확인이 됐는데, 서로 유리한 입장에서 대화를 하려는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며 "비핵화를 의제 속 삼느냐 여부 등을 놓고 어느 쪽이 공격자의 입장에 서느냐를 두고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핵 외교가는 미국의 강경입장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했지만 '북미대화 용의'를 확인하면서 '판'을 깨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식 면에서는 '성명'이나 '담화'보다 덜 공식적인 '외무성 대변인의 문답'을 택했다.

/연합뉴스



## 정가브리핑

### "유치원·초교 맹견 출입 제한"

#### 주승용,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여수)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12건의 법률안을 포함·조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어린이보호시설 및 공공장소 맹견출입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맹견출입을 금지토록 했으며,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주 의원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은 미흡한 상황이다. "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마련돼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주민 의견·건의·애로 사항 청취"

### 윤영일, 13일까지 '2018 의정보고회'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지난 한해 의정활동을 총결산하는 '2018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맞춤형으로 진행하기 위해 지역구인 3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며, 의정활동 및 2017년 주요 예산확보·법안발의 등의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했던 결과보고와 함께 지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새롭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면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관리법 등 대 표발의 51건, 공동발의 참여 818건을 포함 해 총 86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했던 결과보고와 함께 지역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새롭게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면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 "자치품질, 주민 삶바꾼다"

### 임우진 서구청장, 출판기념회 성료



광주 서구청장 재선에 나서는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이 출판기념회를 갖고 대한민국 품질자치를 선언했다.

'임우진의 리무진 품질자치' 출판기념회가 지난 1일 오후 김대중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임 청장은 이 책자에서 지난 4년 재직기간 동안 서구에서 일어난 변화와 품질자치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

임 청장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화한 지 올해로 23년째"라면서 "주민을 자치의 중심에 세우고 오롯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가 이뤄질 때 진정한 자치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치분권' 실현 앞장"

### 김병내, 오늘 남구청장 출마 공식선언



김병내 전 청와대 정부수석실 행정관이 6·13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달 26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청장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김 전 행정관은 광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시 직소민원실장을 역임했다.

김 전 행정관은 "광주·전남 청와대 출신 유일한 출마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출마를 결심했다"며 "남구민의 선택을 받아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5·18특별법 잘 발휘되길"

### 윤봉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식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난 2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윤 전 의장은 이날 오후 5·18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으로 상대후보들과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그 기능을 잘 발휘되기를 기대한다"며 "전두환일 것으로 확실되는 최종발포명령자, 암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북한군 개입 등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에 대한 진상도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기철 기자